

새로운 사회를 예견하는 '미래학'

21세기를 앞둔 未來學의 연구동향

김형국

서울대 교수 · 한국미래학회 회원

알려고 하는 마음은 사람이 타고 나는 것이다. 특히 장차에 대해 알고픈 마음은 사람의 타고난 숙명이다. 미신이라 나무라는데도 시정에서 점괘가 성행하는 것은 장차를 알고 싶은 간절한 사람의 마음을 증거한다. 그러나 오지 않은 미래를 알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어렵길래 사람의 빼어난 덕목을 말할 때 앞을 내다 보는 지혜, 곧 '선견지명'을 높이 칭송하는 것이다.

개인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장차에 생겨날 신상 변화를 미리 가늠하고 거기서 개인의 행복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모인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변화를 미리 예견할 수 있다면 사회는 사회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개인이나 사회의 번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때문이다.

사회구조의 대전환이 미래탐구 자극

미래를 알고 싶은 사회적 요구가 현대에 와서 고조된 것은 1960년대의 일이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선진국형과 발전도상국형으로 구분될 수 있을 듯싶다. 선진국의 경우,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은 사회가 구조적인 변화를 겪게 되면서부터이다. 1960년대를 전후하여 선진국은 산업사회의 성숙 끝에 새로운 사회로의 역사적인 전환을 겪게 된다. 1950년대말을 기점으로 특히 미국의 경우 사무직 종사자가 다수를 기록하고서 부터이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조업 종사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국가경제가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산업사회의 성숙이라 했다. 하지만 고용인구의 다수가 제조업 종사자 대신에 사무직 종사자가 되고부터는 산업사회와는 다른 사회가 오고 있다는 예후가 차츰 식자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오늘 우리가 정보사회의 도래라고 - 미래학자 토플러는 18세기에 서구에서 시발된 산업사회의 발생을 '제2의 물결'이라 했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정보사회를 '제3의 물결'이라 이름붙였다 - 말하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무언지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만 산업사회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뜻에서 '후기산업사회'(Daniel Bel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60년대를 전후하여 사회변화가

급격해지면서

미래에 대한 체계적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보면

미래를 보는 시각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선진국형과 발전도상국형이

교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올수록 무한정의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성장의 신화'에서 벗어나

자원위기나 환경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New York : Basic Books, 1973.)라 이름짓고 있었다. 이런 사회구조의 대전환이 미래에 대한 탐구를 자극했던 것이다. 사회변화가 급격할수록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사회현상이 생겨날 것이고 그만큼 깊의 조건이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거나 불안정해질 염려가 높아지면서 미래탐구가 자극된 것이다.

발전도상국의 경우, 미래에 대한 탐색은 '미래를 앞당기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선진국의 발전상이 바람직한 미래상인데, 그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자면 서구의 근대화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2백년, 3백년의 세월이 소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장구한 미래에 기대되는 경제·사회발전을 사람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단기간에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서 미래의 탐색이 이루어졌다. 먼 장래에 기대되는 가능성을 설정한 뒤 그걸 실현하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을 설계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의 미래연구 또는 미래탐색은 그래서 발전학이고, 계획학인 것이다.

급변하는 한국사회와 미래 예측

발전도상국 가운데 미래에 대한 탐색이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나라로는 우리나라가 으뜸이라 손꼽히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장기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에서 짧은 시간에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때문이다. 계



비람직한 미래는 거기에 합당한 오늘의 선택과 결정을 요구한다.

획학의 방식으로 미래탐구가 우리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초에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고부터이다. 정부의 장기계획에서 자극을 받아 사회 각부문이 해당 분야의 장기종합개발을 시행하는 연쇄반응을 나타냈었다.

국가발전을 장기적으로 모색하는 정부의 정책방식은 학계에도 자극을 주었다. 경제발전을 집중으로 탐색하는 발전경제학(development economics), 발전행정론(development administration)이 학계의 미래탐구를 자극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사회발전의 모색이 경제나 행정분야의 소관일 수는 없었다. 마땅히 과학-기술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회각계의 지혜가 모아져야만 했던 것이다. 곧 인문, 사회, 자연과학이 망라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과학적'이어야 하며, 사회각계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부문적'인 성격의 것 이어야 했다.

종합과학적이고 종합부문적인 미래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말에 태동되었다. 한국미래학회가 1968년에 창설된 것이다. 이 학회의 창립회원들은 미래연구에 대한 당시의 구미의 학풍에서 자극을 받았다. 이를테면 1963년에 프랑스의 벨트랑 쥬브넬이 미래연구를 제창했고, 1967년에는 오슬로에서 '제일차 미래연구 국제회의'가 개최됐으며,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다니엘 벨이 편집한 미래연구서(*Toward The Year 2000*, Boston : Beacon Press, 1967.)를 출간한 일이 그런 자극에 속한다.

한국미래학회는 처음 '한국 2000년회'의 이름으로 발족했다. 그 즈음 또 다른 천년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서기 2000년은 미래를 생각하는데 커다란 분기점이 된다는데서 붙여졌던 이름이었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가 서기 2000년으로 못박을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의 자각에서 한국미래학회로 다시 이름지어졌던 것이다.

학회활동의 초기 성과물로서 대표적인 것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함께 1971년 4월에 완성한 「서기 2000년의 한국에 관한 조사연구」(동시에 출간된 영문보고서의 제목은 'Korea in the Year 2000')였다. 이 보고서는 델파이(Delphi)방법을 미래연구에 적용한 한국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서기 2000년의 미래상을 본격적으로 탐구한 최초의 것이었다는 점이 - 그 뒤 지금까지 이 보고서에 비견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사계의 정평이다 - 특기할 만하다.

이 보고서는 각계의 미래연구에서 델파이 방법을 유행시킨 장본이었다. 델파이방법은 사회변화가 급변하는 한국사회에서 미래예측을 하는데 의미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델파이방법은 과거의 추세를 합당하고 유효한 수학적 공식을 통해 연장해서 미래의 사상을 예측해 보는 종래의 외삽법적 미래예측방식의 한계를 지양하기 위한 것이다. 급속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의 미래는 과거의 추세의 연장선에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사태를 연속적으로 겪고 있는 경우와 하겠는데, 그런 사태의 발생은 해당분야 전문가의 전문적 의견과 판단에 달려 있기도 하다는 점에 전제한 뒤 미래에 일어날 가능한 일을 전문가에게 설문조사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낙관론과 비관론 얹갈려

앞서 미래탐색은 선진국형과 발전도상국형으로 구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발의 배경은 그렇게 구별할 수 있지만 현대사인 지난 한 세대에 축적된 미래연구방식은 하나의 체계 속으로 종합, 정리될 수 있다. 곧, 미래연구는 세가지 중요요소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첫째,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미래가 전개될 양상을 살펴보는 것인데, 이 경우에 많이 원용하는 것이 통계적 미래예측이다. 과거의 추세를 연장해 보는 외삽법, 앞서 일어난 사태에서 교훈을 얻는 내삽법, 전문가의 전문적 식견을 빌려서 살펴보는 델파이법이 유효하게 이용된다.

미래연구의 둘째 중요 구성은 미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판단적 미래탐구이다.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을 위해서이다. 선택은 삶의 의미를 들리려는 가치판단이 전제된다. 이런 미래연구는 특히 신학, 철학에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미래연구이다.

세번째로 중요한 미래연구는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오늘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의사선택과 행동결정에 대한 것이다. 바람직한 미래는 거기에 합당한 오늘의 선택과 결정을 요구한다. 바람직한 일을 위해 오늘 어떤 투자를 해야하며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미래탐구는 바로 정책학이다. 같은 논리에서 좋은 미래학은 좋은 현재학이란 결론에도 도달한다. 우리사회가 지난 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시발로 미래탐색이 사회의 중요 행동방식이 되었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발전학으로서의 미래연구는 바로 이 분류에 속하는 미래연구인 것이다.

그러나 발전학이 미래학의 일부이긴 해도 미래학의 전부가 아니다. 조그마한 일부일 뿐이다. 사실, 미래학은 곧 발전학이란 항간의 오해가 있었다. 종합학문적인 미래연구는 정부같은 거대 조직체가 능히 할 만한 과제라는 현실조건을 넘어, 사회의 미래상을 정권이 독점, 악용해온 대목이 우리사회에서 많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인내와 침묵을 강요하는데 정부당국이 그런 '장미빛 미래'가 앞장서왔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따지고 보면 미래연구에서 미

미래학 관계도서

- 사회변동과 행정 / 이한빈 / 박영사
- 미래를 묻는다(논총) / 한국미래학회 / 나남
- 미래를 되돌아본다(에세이 : 전망의 회고) / 한국미래학회 / 나남
- 제3의 물결 / 앤빈 토플러 / 기린원 · 학원사 · 홍신문화사 · 홍성사
- 제4의 물결(거대한 새물결) / 존 네이스비트 / 원음사 · 고려원 · 예찬사
- 미래의 충격 / 앤빈 토플러 / 한마음사 · 범우사 · 가야출판사
- 미래학 / 香山健一 / 쇠림 옮김 / 현암사
- 미래학이란 무엇인가 / 앤빈 토플러 편 / 김배산 옮김 / 종로서적
- 미래의 인류사회 / 콘라드 H·워딩턴 / 이원식 / 한마음사
- 세계의 미래상 上·下 / OECD 편 / 이천표 옮김 / 삼성문화문고
- 미래는 그래도 구원될 것인가 / 프레드릭 하임 / 이동승 / 탐구당
- 미래사회 / D. 마이클 / 김려수 옮김 / 을유 문화사

래를 보는 시각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 낙관론의 기수는 이를테면 한국의 경제성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던 허만 칸(H. Kahn and J. Simon, *The Resourceful Earth*, 1984)이고 비관론의 대표적 저술은 우리말로도 번역된 바 있는 D.L. Meadows 등의 저서(*The Limits to Growth*, 1972)이다 – 교차해왔다고 하겠다. 이들 시각은 이렇게 대조적이다. 첫째, 지구상에는 얼마의 인구까지가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쟁점이다. 낙관론은 1980년 기준의 세계인구 두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데, 사람의 창의성은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미래를 만드는 데에 관건이기 때문이다. 비관론의 입장은 정반대이다. 이미 지구상에는 너무 많은 인구가 있고 그래서 인구폭발의 지경에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쟁점은 생존에 불가결한 공기, 물, 식물이 얼마만큼의 여유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낙관론에 따르면 현재의 자연생태계는 상당한 탄력과 여유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생태계의 위험신호에 신경을 쓰고 있는 한,

비록 문제가 생기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은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관론의 입장은 사람이 생존하는 환경이 어떤 형편인지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세번째의 쟁점은 지구상의 에너지와 재사용할 수 없는 자원의 재고가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낙관론은 재고가 충분하다고 한다. 기름의 경우, 일시적인 부족현상이 생기곤 했지만 그건 정부의 잘못된 규제와 자본주의의 불충분 때문이라고 본다. 비관론은 거꾸로 자원의 재고는 한정되어 있는데다 몇몇 자원은 이미 바닥이 났는데 석유자원이 그런 보기라 보는 것이다.

미래를 살펴보는 데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양립하고 있지만 실제로 세가지의 정립적인 행동방식이 있다. 첫째는 낙관론을 생활화한 '기업가형'이고 둘째는 비관론에 바탕을 둔 '생존자형'이며, 세째는 위의 둘을 조정한 '절충자형'이다. 기업가형의 행동방식은, 자연은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는 보고인 까닭에 경제성장을 늦추거나 중지하는 것이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라 본다. 생존자형의 것은 현재의 사람의 생존방식을 고수한다면 인류의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는 쪽이다. 절충자형의 행동방식은 인본주의를 들리는 데 역점을 둔다. 그리고 세상은 복잡한 문제로 양켜 있는데 문제의 해결은 위험과 가능성의 균형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위험부담을 싫어하지만 위험이 있는 행동을 기피만 하는 입장은 취하지 않으며, 또한 성장하지 못할까 하는 염려때문에 어떤 위험도 무릅쓰려는 기업가의 행동방식도 취하지 않는다.

'발전'과 '성장'의 강박에서 벗어나야

이런 대조적인 미래시각은 지난 한 세대의 우리의 경험이기도 했다. '발전주의' 또는 '성장주의'의 강박에 빠져 있던 지난 한 세대에 정부실무가 주도한 미래학은 바로 발전학이었다. 성장의 극대화가 국민 개개인과 사회 각층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수렴해 주는 유일무이한 사회가치였던 것이다.

그런데 민간쪽의 미래연구, 특히 한국미래학회가 관심을 기울였던 미래탐구는 그런 단선적인 것이 아니었다. 경제성장정책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상의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 한마디로 "경제성장을 넘어서, 삶의

질을 늘리는데" 힘썼던 것이다. 한창 경제성장주의가 사회를 압도하고 있던 시절에 학회가 개최했던 일련의 세미나와 – '발전과 갈등' (1973), 「사회개발의 방향과 과제」(1976), 「1991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삶의 질」(1976), 「경제성장을 넘어서」(1978) 같은 주제로 열렸다 – 관련된 특별 간행물('발전과 갈등', 1974)이 학회의 그런 관심을 잘 말해준다.

오늘의 우리사회를 돌아보면 민간쪽의 미래 관심이 정당했음을 알 수 있다. 시장경제의 원칙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은 기회, 능력, 실적이 동질적일 수 없는 인간생활에서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사이의 간격을 벌려 놓았다. 경제성장의 신화는 또한 세계적인 자원위기와 결부되어 환경문제로 비화되었다. 돌이켜 보면 경제성장의 지난 한 세대는 점차 사회정의의 실현과 환경보존이 점차 그 설 자리에 대한 이해를 더한 기간이었다.

미래연구는 가치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미래연구가 가치에 제약되는 학문이며 동시에 바람직한 가치의 사회적 창출에 힘쓰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큰 전환을 기록할 21세기의 도래를 바라보는 오늘의 시점에서 다가올 미래에 풍미할 사회가치는 미래연구의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래에도 이어질 사회가치는 참으로 다원적일 것이다. 성장이 계속 중요할 것이지만 뜻지않게 사회정의를 요구할 것이며, 환경이 제대로 보존되는 삶의 질을 사람들이 추구할 것이다. 다원적이기에 갈등 요소도 안고 있는 이들 가치간의 조화와 조정은 정치적 절차를 기다린다. 우리의 미래에 민주화가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것은 바로 다원적인 가치의 조화로운 조정을 위해서이다.

미래는 말 그대로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인 미래를 탐구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삶의 방식임이 분명하지만 한편, 오지 않은 것을 시비하는 황당무계함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간에 유한한 사람의 삶은 그 유한한 시간의 가치있는 관리가 요구됨은 자명하다. 해서 과거를 거울삼아 오늘을 살피듯이, 오늘에서 미래를 보고 또 미래에서 오늘을 보는 것도 삶의 조건이다. 과거를 설명하는 역사탐구가 정당하듯이, 미래를 다루려는 미래연구도 또한 정당한 것이다.